

1980년 봄 부산지역의 민주화운동*

김 선 미**

1. 머리말
2. 학원민주화운동과 신군부 반대 투쟁
 - 1) 학생운동 조직의 재건과 확장
 - 2) 학생회의 부활과 신군부 반대 투쟁
3. 청년층의 결집과 노동운동의 고양
 - 1) 진보적 청년층의 '민주청년협의회' 결성 운동
 - 2)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과 농성 파업의 확산
4. 맺음말

<국문초록>

이 연구는 1980년 봄 부산지역 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가, 청년층, 노동계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대학에서는 학생운동이 확산되고 활성화되었다. 1979년 부마민주항쟁을 추동했던 학생운동 조직이 활동을 재개하고, 새로운 조직이 생겨나는 등으로 학생운동이 더욱 확대된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학생회의 부활을 중심으로 한 학원민주화운동이 부산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동시에 학생들은 신군부의 권력 장악을 저지하기 위해, 시위와 농성을 벌이고 유인물을 살포하는 등 반대 투쟁을 전개했다. 청년층에서는 민주청년협의회를 결성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었다. 이는 유신 말기 부산지역 청년들의 결집 경험을 기반으로, 민주적 청년단체를 조직하기 위한 것이었다. 비록 5·17내란으로 좌절되고 말았지만, 이들의 결집은 5·18의 진상을 알리기 위한 활동으로 이어졌다. 노동계

* 이 논문은 2023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B5A17089784)

** 부산대학교 통일한국연구원 연구원(kimssinai@hanmail.net)

에서는 생존권을 확보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 노동자들의 치열한 투쟁이 전개되었는데, 이는 1970년대 후반에 비해 노동쟁의가 두 배 이상 급증하는 등 폭발적인 양상을 보여준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 이 연구는 1980년 봄 지역사회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1980년 ‘민주화의 봄’에 대한 온전한 인식의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 주요어: 1980년 봄, 부산, 학생운동, 민주청년협의회, 노동운동

1. 머리말

한국 현대사에서 1980년 봄은 격변기이자 전환기였다. 18년 철권통치가 무너지면서 한국 사회의 민주적 변화를 위한 가능성이 발생했고, 동시에 유신체제를 연장하려는 세력이 등장하여 양대 세력의 격렬한 충돌이 빚어진 것이다.

그간 이러한 과정은 서울 일변도로 인식되었다. ‘서울의 봄’이라는 표현은 이런 인식을 반영한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지역사회 역시 격랑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고, 특히 부산에서 1980년 봄은 각별한 의미를 지녔다. 1980년 봄은 1979년 10·26 박정희의 사망에서 비롯한 것이었고, 이를 촉발한 것은 10월 16일 부산에서 시작된 부마민주항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80년 봄 부산에서도 박정희 정권의 붕괴로 열린 새로운 정치 공간에 부응하여 민주적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대응이 자못 활발했다. 그 거점은 부마민주항쟁을 추동한 대학생, 진보적 청년층, 박정희식 경제개발의 희생자인 노동계였다. 대응의 양상은 민주 역량을 조직화하고 체계를 갖추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1980년 봄의 지역 현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은 매우 낮다. 연구 분석 역시 저조하여, 관련 논문은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세 차례 간행된 『부산민주운동사』(1998; 2003; 2022)에는 이 시기의 학생운동과 노동운

동이 서술되어 있다.¹⁾

이 논문은 『부산민주운동사』에 반영된 지역사회의 인식을 바탕으로, 1980년 봄 부산지역 민주화운동의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적으로 검토하려 한다.

먼저 부마민주항쟁 이후 1979년 말에서 1980년 초까지, 부산지역의 학생운동 조직이 재건되는 과정을 규명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1980년 봄 총학생회의 부활과 신군부 반대 투쟁의 전개 양상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논문에서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1980년 봄 지역 청년층의 민주적 결집을 규명할 것이다. 가칭 ‘민주청년협의회’로 귀결된 결집은 5·17내란으로 중단되었지만, 그 활동은 ‘5·18 진상 알리기’로 이어졌다. 따라서 이 논문은 ‘민주청년협의회’를 다루는 최초의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1980년 봄 부산지역 노동운동의 폭발적 양상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위해 이 논문에서는 주요 일간지와 대학신문 등을 기본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1981년 부림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할 것이다.²⁾ 부림사건은 ‘민주청년협의회’의 중심인물들이 연루된 탓에 관련 내용이 판결문에 담겼는데, 이는 2022년 부림사건의 재심 과정에서 확보되었다. 이로써 관련자의 기억에 의존했던 ‘민주청년협의회’ 관련 내용을 당시 자료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1980년 합동참모본부에서 생산한 「2군 상황일지」를 분석할 것이다.³⁾ 이 자료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광주 밖의 5·18항쟁 자료수집 과정에서 확보되었다.⁴⁾ 이를 통해, 1980년 봄 부산지역의 신군부 반대

1)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부산민주운동사』, 부산광역시, 1998, 434·450~455·459~464쪽; 민주공원, 『민주공원과 함께 하는 부산민주운동사』, 인쇄골, 2003, 110~111쪽;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부산민주운동사』 I,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2021, 283~295쪽.

2) 부산지방법원, 「판결」(사건 81 고단 7929, 8628 병합), 1982. 부림사건은 1981년 부산지역 지식인·교사·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5공화국 최대의 용공조작사건이다. 2009·2014·2016년 재심의 결과, 관련자들에 대한 무죄와 국가 배상이 결정되었다.

3)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10·26 2군 상황일지」(부산·경남), 1980.

4) 광주 밖의 5·18 진상에 대한 조사는 다음으로 정리되었다. 양윤신·김종세·김균식·정성일·김성환·오도엽·허인규 편찬(이하 ‘양윤신 외’), 『‘광주밖’ 전국의 5·18진상』, 5·18기념재단, 2024.

투쟁과 5·18 진상 알리기 양상을 분석하고, 부림사건 판결문의 관련 부분을 검증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부림사건 판결문과 「2군 상황일지」를 분석하는 최초의 논문이 될 것이다. 이외에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관련자 구술자료를 활용함과 동시에, 추가로 확보한 구술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이로써 이 논문은 1980년 봄 부산지역의 민주화운동을 복원하여, 한국현대사에서 1980년 봄이 가진 전모를 온전하게 파악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더 불어 새로운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왕의 『부산민주운동사』 서술 가운데 오류를 바로잡고 불비한 부분을 보완할 것이다.

2. 학원민주화운동과 신군부 반대 투쟁

1) 학생운동 조직의 재건과 확장

1980년 봄 대학은 가장 활발한 움직임이 전개된 곳이었다. 부마민주항쟁의 진원지로서, 박정희 정권의 붕괴를 촉발하는 데 결정적 계기를 만든 것이 대학생 시위였기 때문이다.

부산대는 시위 과정에서 다수의 학생이 체포 구금되었지만, 학생운동 조직은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 언더서클은 학생운동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시위를 추동하는 역할을 했지만, 계엄 당국의 수사에서 발각되지 않았다.⁵⁾ ‘아카데미’ 등 시위 기획에 참여한 이념서클, ‘성아회’와 ‘전통예술연구회’ 등 시위에 적극 참여한 서클, ‘동녘’처럼 유인물 배포자가 포함된 동문서클,⁶⁾ ‘경제사연구회’와 같은 학습모임의 경우에도, 서클이나 모임 자체를 대상으로

5) 부산대의 비합법 학생조직인 언더서클은 학생운동 조직을 연계하여 부산대 시위를 추동했지만, 개인 단위로 시위에 참여했기에 주동자 수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언더서클의 형성과 부산대 시위 준비 과정은 김선미, 「1970년대 후반 부산지역 학생운동과 부마항쟁-부산대 시위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67,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8, 375~384쪽 참고.

6) ‘동녘’은 10월 15일 부산대에 「민주선언문」을 배포한 이진결(기계설계학과 3년)의 고교 동문서클로, 차선근(부산대 기계공학도 2년) 등 다수의 동문이 「민주선언문」 배포에 참여했다.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 2022, 143쪽.

하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는 10월 26일 박정희가 피살되면서, 수사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위의 배후와 이적 혐의를 찾으려 폭력과 고문을 자행하며 수사를 주도하던 중앙정보부의 수장인 김재규가 박정희를 저격한 당사자로 드러나면서, 중앙정보부가 무력화되고 말았다.⁷⁾

박정희 사후 정국의 소강상태에서, 부산대에서는 언더서클을 중심으로 한 학생운동권의 연계망이 여전히 유지되었고, 학습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 활동은 더욱 왕성하게 전개되었다. 이 시기 주요한 논의 주제는 부마민주항쟁과 10·26정변 및 12·12쿠데타에 대한 평가, 당면한 정국에 대한 대응 등이었다.⁸⁾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걸쳐, 구속된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면서 학내 분위기는 다시 고조되었다. 부마민주항쟁으로 구속된 부산대 학생은 20명으로, 18명이 이 시기에 석방되었다.⁹⁾ 이들은 12월 8일 부산대 10·16시위의 주동자인 정광민(경제학과 2년)의 석방을 계기로, '10·16동지회'로 결집했다. 학생회와 같은 정당성을 지닌 조직적 구심이 없는 상태에서, 10·16동지회의 출현은 도덕적 권위를 지닌 유일한 존재를 의미했다. 10·16동지회는 대자보와 유인물을 통해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며 학내의 여론을 주도했다.¹⁰⁾

1980년 1학기 개학과 더불어 부산대에는 새로운 이념서클도 등장했다. 대

7) 부마민주항쟁의 시위 주동자와 배후 수사는 중앙정보부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치안본부에서 50명의 인원을 파견하여 초기 수사를 선점했지만, 부산 전역의 일선 경찰서를 장악하고 수사를 주도한 것은 중앙정보부였다. 중앙정보부, 「중요수사활동보고」, 1979, 346쪽; 중앙정보부, 「부산대 등 집단 시위 및 난동사건 수사상황」, 1979, 338~339쪽; 중앙정보부, 「부산대 등 집단 시위 및 난동사건 수사상황(2보)」, 1979, 323쪽; 중앙정보부, 「부산사태 수사상황」, 1979.

8) 부산지방법원, 앞의 글, 84~85·117쪽.

9) 구속자는 이진걸, 전도걸, 김제원, 엄태언, 이병열, 이주홍, 이현호, 임정식, 정광민, 강호섭, 김중세, 백진현, 백하현, 성호흥, 이상화, 이호철, 차선근, 하정갑, 허천호, 황현규이다. 이 가운데 이진걸과 전도걸은 1980년 3월 6일에 석방되었다. 법무부, 「부마소요사건(89명)」, 『계엄사건총명부』, 1981~1988: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앞의 책, 362~364·373~374쪽.

10) 김중세 구술, 김선미 면접, 2026년 4월 3일.

표적인 것은 민족사연구회와 기독교학생회(SCA)였다. 민족사연구회의 중심인물은 허천호(화학공학과 2년)와 강용현(화학기체공학과 3년) 등 성안야학의¹¹⁾ 강학이었다. 이들은 1979년 언더서클을 고리로 부산대학교 학생운동권에 포괄되어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했다. 박정희 정권의 붕괴를 맞아, 이들은 학내에 조직적 기반을 가지고 학생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신생 동아리를 만든 것이다.¹²⁾ 기독교학생회(SCA)의 중심인물은 이성철(사회학과 2년), 진기행(철학과 2년), 배정우(철학과 2년) 등이다. 이들은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KSCF)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사건에 연루되어 큰 타격을 받자, 부산대를 거점으로 진보적 기독교 학생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던 것이다.¹³⁾

동아대에서도 학생운동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었다. 1970년대 말 동아대에 언더서클을 조직하기 위한 몇 차례의 시도는 성과를 보지 못했지만,¹⁴⁾ 1980년 봄 송세경은 이흥원·허기용·장수호 등으로 진보적 학습그룹을 조직하는 데 성공했다.¹⁵⁾

한편으로 지하신문이 창간되어, 동아대 곳곳에 배포되기도 했다. 1980년 4월 22일 변재관(법정계열 1년) 등 시항문학회 회원들은 『무명지』를 창간하

11) 1977년 하반기 가야동 성안교회에서 개설된 노동야학이다. 부산 출신의 서울지역 대학생인 신기엽(서울대 휴학생) 등이 부산대의 허천호, 부산공전의 박옥영과 함께 개설했다. 이성홍, 『70~80년대 부산지역 노동야학 운동사 개관』, 『성찰과 전망』4,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민주주의사회연구소, 2009, 110쪽; 허천호 구술, 차성환 면접, 국사편찬위원회 구술자료 수집사업, 2012.

12) 이성홍, 앞의 글, 113쪽; 이성홍 구술, 차성환 면접, 국사편찬위원회 구술자료수집사업, 2013; 이귀원 구술, 김선미 면접, 2026.4.10.

13) 김종세 구술, 차성환 면접,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구술자료수집사업, 2009; 부산민주운동사 편찬위원회, 2021, 284쪽. 김종세(수학과 4년)는 KSCF 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대 기독교학생회의 조직을 지원했다.

14) 1978년 이승원과 김해수 등이 동아독서회에서 활동했고, 1979년 한현석(서울대 국제경제학과)이 주도하여 황주호·백인호·김재경·권병기·최형욱 등으로 스타디그룹을 구성했으며, 송세경(서울대 농대 출신의 사회운동가)이 이흥원·손우식 등으로 학습그룹 조직을 시도한 것 등이 알려져 있다.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1998), 331쪽;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2021), 202·225쪽; 신종권 구술, 차성환 면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구술사료수집사업, 2008; 최형욱 구술, 이가연 면접, 2018.

15) 이 모임은 1981년 2월까지 지속되었다. 부산지방법원, 앞의 글, 149·156·178쪽.

고, 4월 29일 제2호를 발간했다.¹⁶⁾ 발행인을 익명인 'You'로 한 『무명지』는, 16절판(197×272mm) 양면인쇄 8면으로 제작되어, 1천여 부가 교내 곳곳에 배포되었다. 3호는 제작을 마친 후 5·17내란으로 배포가 중단되고 말았지만, 『무명지』는 창간호와 2호의 배포만으로도 학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¹⁷⁾

대학 밖에서는 노동야학이 활기를 띠었다. 부산에서 대학생이 노동야학을 설립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으로, 가야, 사상, 영도 등 대규모 사업장 인근의 노동자 밀집지역에 성안야학, 사상야학, 청야야학, 밀알야학 등이 개설되었다.¹⁸⁾ 노동야학은 학생운동 조직은 아니지만, 대학생인 강학 가운데 상당수가 학생운동에 연계되면서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성안야학은 1980년 봄 부산대에 민족사연구회를 창립하는 한편, 근거지를 가야성당으로 옮겨 가야야학으로 거듭났다.¹⁹⁾ 민족사연구회의 신입 회원들이 합류하여 강학의 예비집단을 형성하면서, 조직이 확충되고 활기는 배가되었다.²⁰⁾

새로운 노동야학이 생겨나기도 했다. 1980년 3월 부산지역 신발산업의 중심지인 당감동에 당감야학이 신설되었는데, 이를 주도한 것은 부산대 언더서클의 리더인 고호석(영어영문학과 졸업생)이었다. 당감야학은 근거지인 당감성당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²¹⁾ 부산대 학생들이 대거 강학으로 참여하

16) 「무명지 발간, 『동아대학보』 1980.5.12.

17) 「참고인 진술조서(변재판)」, 조사관 이창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2022; 양운신 외, 앞의 책, 158쪽.

18) 이성흥, 앞의 글, 109~116쪽.

19) 성안야학은 가야동 성안교회를 근거지로 했는데, 강학들이 부마민주항쟁에 연루되자 교회는 퇴거를 요청했다. 이에 근거지를 가야성당으로 옮기면서, 명칭도 가야야학으로 바꾸었다(허천호, 앞의 구술). 다만 그 시기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달리, 1979년 말이 아니라 1980년 3월 이후이다. 이는 1980년 3월 이후에 성안야학에 참여한 이귀원(부산대 사학과 1년)의 구술로 확인된다. 이귀원은 1980년 3월 부산대에 입학하여 민족사연구회에 가입한 뒤 야학에 참여했는데, 당시 성안야학은 성안교회에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야야학의 개설 시기는 1980년 3월 이후이다(이귀원, 앞의 구술).

20) 5·17내란으로 대학이 휴교 되면서, 야학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교과목이 늘어났고, 학생과 강학의 문집을 간행하기도 했다. 이성흥, 앞의 구술; 이귀원, 앞의 구술.

21) 당시 당감성당의 주임신부는 오수영 신부였고, 신도회 회장은 이흥록(전 부산양협 이사장) 변호사였다. 또한 송기인 신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고호석, 「올곧음, 넉넉함, 그리고 아름다움」, 『(송기인 신부 은경축·화갑기념문집) 신부님이 거기 있었네』, 인쇄골, 1997, 91쪽.

여 활기를 띠었다.²²⁾

이상과 같이 1980년 봄 부산의 대학가에서는 기존의 학생운동 조직이 큰 타격 없이 보존된 데 더해, 새로운 학생운동 조직이 출현하여 힘을 보탰다. 이들은 부마민주항쟁의 참여 경험으로 한껏 고무되었으며, 시위로 구속된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면서 기세가 더욱 올랐다. 학교 밖에서는 노동야학이 확충되면서 학생운동의 외연이 더욱 확장되었다. 이렇게 고조된 민주적 열기를 바탕으로, 1980년 봄의 학원민주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 학생회의 부활과 신군부 반대 투쟁

1980년 봄 학원민주화운동의 의제는 학원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학원 사찰과 통제라는 유신 적폐를 척결하고, 학칙 개정과 학내의 언론자유를 통하여 비민주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이었다. 이는 학도호국단의 해체와 학생자치기구의 복원으로 시작되었다.

학도호국단은 1949년 이승만 정권이 설치한 관제 단체로 1960년 4월혁명으로 해체되었지만, 영구 집권을 노리던 박정희 정권에 의해 1975년 재설치되었다. 이 때문에 박정희의 사망으로 열린 ‘민주화의 봄’에서 학생자치기구인 학생회의 부활은 학원 민주화의 단초로 여겨졌다. 이에 1980년 3월 27일 연세대, 28일 서울대와 이화여대가 신호탄을 쏘아올리면서, 총학생회장 선거는 전국으로 확산되었다.²³⁾

부산대에서는 학생운동권이 주도하여, 학과를 기반으로 단과대학 학생회와 총학생회를 건설한다는 기본 계획을 세우고 활동에 돌입했다. 1979년 11월 19일 대학의 휴교조치가 해제되면서,²⁴⁾ 겨울방학 기간 언더서클과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한 학생운동 조직들은 각종 선전물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10·16동지회’의 학내 대자보 활동을 기획하고 집행했다.

그 결과 1980년 2월 26일 발족한 ‘학원민주화추진발기회’는 79학년도 각

22) 부산지방법원, 앞의 글, 112쪽; 이성홍, 앞의 글, 123~127쪽.

23) 「자율화 진통...대학가」, 『동아일보』 1980.3.29.; 김명인, 『두 번의 계엄령 사이에서』, 돌베개, 2025, 141쪽.

24) 「계엄포고 8호 4년제 대학도 휴교 해제」, 『경향신문』 1979.11.16.

학과의 학회장회의를 소집하여, 개강과 동시에 80학년도 학회장 및 신입생 계열대표를 조기에 선출하여 '학생대표자회의'를 발족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3월 8일 59개 학과의 학회장과 1학년 계열대표 74명으로 구성된 '부산대학교 학생대표자회의'(이하 '학생대표자회의')가 출범했고, '학원민주화추진발기회'는 자진 해체했다. 학생대표자회의는 1차 모임에서 신재식(사회복지학과 4년)을 의장으로 선출하고, 활동을 시작했다.²⁵⁾

학생대표자회의는 학도호국단 개정령으로²⁶⁾ 또다시 학원의 자율성을 호도하려는 문교부와 학교 당국에 맞서, 학생들의 여론을 결집하여 강력하게 대응했다. 공개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학원민주화와 관련한 각종 의제를 공론화시켰다. 이 과정에는 3월 15일 복직한 시국사건 관련자 복교생들도 '복교생협의회'를 구성하여 참여했다.²⁷⁾

이에 3월 13일부터 학과별 공개토론회가, 20일부터 단과대학별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공청회에서는 학생회칙을 제·개정함으로써, 상향식(학과를 기반으로 단대 학생회를 구성하고 총학 재건) 직선제를 통한 총학생회의 부활을 지지하는 학생 대중의 열망이 강력하게 표출되었다. 수백에서 1천여 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모인 공청회는,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질의응답과 토론이 거듭되면서, 학원자율화에 대한 공감과 관심을 확산시킨 것이다.²⁸⁾

25) 「학생대표자회의의 난항」, 「본 궤도 진입 늦은 효원의 학원 자율화」, 『부대신문』 1980.3.24.

26) 학도호국단 개정령은 학도호국단의 명칭을 유지한 채, 사단장과 연대장 등 간부의 호칭을 총학생장·단과대학 학생장 등으로 바꾸고, 총학생장은 단과대 학생장단에서 간선하되, 단과대 학생장은 학교장이 직선 또는 간선을 결정하고, 총학생장과 단대 학생장 등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와 같은 의결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1980년 2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설치령 개정 학도호국단 간부 선거제로」, 『동아일보』 1980.2.16.

27) 1974년 이후 제적되었다가 긴급조치 해제로 복권된 학생들로, 제적생 17명 가운데 10명의 복적이 확정되고, 이 가운데 8명이 복교했다. 이들은 '재입학'을 고집하는 학교측에 맞서, '우리의 소견'을 발표하여, 복학은 긴급조치 해제에 따라 원천적으로 부당한 출학처분의 원인무효에 의한 권리회복이므로, 강제출학을 인정하는 재입학은 부당하며, '복학'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전국 대학 제적생 복교 서둘러」, 『동아일보』 1980.1.24.; 「시국과 관련되어 제적된 前 본교생 8명 복적」, 『부대신문』 1980.3.24.; 부산대학교 오십년사편찬위원회, 『부산대학교 오십년사(1946~1996)』, 1997, 191쪽.

28) 「공과대학 선관위 구성」, 『부대신문』 1980.3.24.; 「'대표자회의' 2일 공청회-학교측서 인정 않으면 서명운동 전개키로」, 『부대신문』 1980.3.31.

이를 바탕으로 4월 2일 학생대표자회의는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운집한 가운데, 학도호국단의 철폐와 학생회의 부활, 지도교수제와 상담지도관실의 폐지, 학내언론의 자율화, 서클 활동의 자유 보장 등 11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4월 10일에는 '총장 이하 학교 당국자들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채택하여, 어용교수 처리, 학내 행정의 민주화 등을 요구했다.²⁹⁾

4월 19일 학생대표자회의는 4·19기념식을 개최했는데, 4천여 명의 학생이 참석했다. 18일에는 식전 행사로, 이문영 고려대 교수의 초청강연회와 학생 세미나를 실시하고, 모의 데모를 벌이기도 했다.³⁰⁾ 5월 7일 학생대표자회의는 공대와 상대 공청회에서 제기된, 학생회칙 전문에 '10·16정신' 기재를 확정했다.³¹⁾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결국 부산대 당국은 직선제 학생회를 수용했고, 이후 학생회장 선거가 숨 가쁘게 추진되었다. 3월26일 가정대학을 시작으로 4월 29일 문리대학까지, 8개 단과대학 학생회장의 선출이 완료되었다. 5월 16일 총학생회장(이창훈, 기계설계학과 3년)과 총여학생회장(이정희, 의류학과 3년)이 선출되었다.³²⁾

동아대에서는 학기 초부터 학교 측이 학생들과 충돌했다. 3월 19일 총장과 부총장 및 각 처장이 총학생회장의 간접선거를 결정한 학도호국단 개정안 심의 규정을 확정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학생들은 학생회장의 상향식 직선제를 주장하며 자율적 학생자치체제의 운영방침을 천명하는 것으로 대응했다.³³⁾

4월 2일 학교 측이 총학생회 선거를 강행하자, 마침내 학생들은 농성으로 맞섰다. 이날은 8개 단과대학의 학생회장 선거일이었지만, 학생들은 12시 정오 도서관 앞에 모여 선거를 거부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에는 신해주(철학과 3년)와 농대 학생 등 6백여 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학칙을 직선제로

29) 「학원 민주화 결의문 채택」, 『부대신문』 1980.4.7.

30) 「부활된 4·19기념행사」, 『부대신문』 1980.4.21.

31) 「공대 투표율 33.3%. 단대 공청회 활발해져」, 『부대신문』 1980.4.7.

32) 「단대 학생회 구성 모두 끝나. 29일 문리대 투표를 마지막으로」, 『부대신문』 1980.5.5.; 부산대학교 오십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2쪽.

33) 동아대학교 50년사 편찬위원회, 『동아대학교 50년사 1946~1996』, 1998, 339쪽.

개정한 뒤 학생회 선거를 실시할 것, 대학 내의 언론자유를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며 1시간 30분 동안 농성을 벌였다.³⁴⁾

결국 공대의 선거 연기가 재결의되는 등 선거가 무산되면서, 학교 측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4월 3일 총장은 선거 백지화를 선언하는 담화를 발표했고, 선거 방식을 개정한 후 선거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이후 학생들은 4월 4일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를 발족했는데, 전찬수(법학과 4년)를 위원장으로 하여 학칙 개정을 위한 각 학과 대표로 구성했다. 이후 학칙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4월 10일 학과별 공청회가, 4월 12~14일에는 단과대학별 공청회가, 19일에는 동아대 전체의 공청회가 개최되었다.³⁵⁾ 4월 24일에는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와 교수 측 '학생지도위원회'의 연석회담이 진행되어, 최종 확정안이 마련되었다. 4월 26일 총학생회 회칙과 학칙 개정 시안이 확정 발표되었는데, 총학생회의 부활과 학생 대표의 직접 선거 및 일정 확정 등을 내용으로 했다.

이에 박흥기(관광경영학과 4년)를 위원장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족되어, 30일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했다. 5월 1일부터 3일까지 단과대학 입후보자의 소견 발표에 이어, 6일과 7일에는 총학생회장 입후보자의 소견 발표가 진행되었다. 5월 8일 총학생회장 선거를 실시하여, 신해주를 총학생회장으로 선출했다.³⁶⁾

수산대학(현 부경대)³⁷⁾에서도 학원 자율화 요구가 터져나왔다. 4월 9일 3백여 명의 학생들은 학장 퇴진, 학생회 부활, 학내 언론자유 등을 내걸고 철야농성에 돌입했다.³⁸⁾ 특히 수산대학에서는 군인 출신인 김광옥 학장의 강압적인 학사 운영과 횡령 비리 혐의가 불만의 표적이 되었다.³⁹⁾ 4월 10일 김

34) 「학생장 선거 거부 동아대, 직선 요구」, 『경향신문』 1980.4.3.; 「학원 진통 진지한 자세로 '쟁점' 접근을」, 『경향신문』 1980.5.5.

35) 「문교부 휴강 19교 철야농성 24교」, 『동아일보』 1980.4.18.

36) 「6년 공백 딛고 총학생회 재출범」, 『동아대학보』 1980.5.12.; 동아대학교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그대, 민족동아여!』, 2007, 120~121쪽.

37) 1996년 부산공업대학(부산공업전문대학의 후신)과 통합하여, 국립부경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했다.

38) 「부산수대 무기휴강」, 『동아일보』 1980.4.11.; 「문교부 휴강 19교 철야농성 24교」, 『동아일보』 1980.4.18.

광옥 학장과 학생대표의 협상이 결렬되자, 11일 교수회의는 무기 휴강을 결정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농성을 멈추지 않았고, 4월 16일까지 지속했다. 당시 수산대학 학생이 1,500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⁴⁰⁾ 전교생의 20%가 참여한 농성은 학원민주화운동에 대한 수산대학 학생들의 뜨거운 열기를 보여준다.⁴¹⁾ 결국 이듬해인 1981년 김광옥 학장은 수산대학 사상 최장기 학장의 자리에서 사임했다.⁴²⁾

5월 들어 동의공업전문대학과 부산공업전문대학(현 부경대)에도 시위가 확산되었다. 5월 12일 동의공전에서는 1천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성토대회를 개최했다. 학생들은 학칙 개정, 불신 교수 자진사퇴, 학원 언론자유 보장 등 9개 항의 요구사항을 내세우고 성토대회를 가진 뒤, 일부는 철야농성에 돌입했다.⁴³⁾

5월 12~13일 부산공전 학생 1천여 명은 전문대학의 문제점을 시정할 것과 병역 혜택 등 8개 항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고 교내시위와 철야농성을 벌였다.⁴⁴⁾ 14일 1천여 명의 부산공전 학생들은 성지공전(현 부산과학기술대)과 동원공전(현 동명대) 학생들의 시위 가담을 촉구했다. 학생들은 성지공전 앞에서 ‘계엄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맞서고, 동원공전으로 향하던 중 경찰과 대치하는 등 가두시위를 전개했다.⁴⁵⁾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1980년 봄 부산에서도 총학생회 부활과 자율성 보장을 핵심으로, 학원의 민주적 재편을 위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이는 단지 학생자치기구의 구성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학원이 민주적으로 재편되는 과정의 상징적 양상이었다.

한편 5월 들어 전국적으로 학생회의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전두환의 신군

39) 이용화 구술, 차성환 면접, 국사편찬위원회 구술자료수집사업, 2012.

40) 국립부경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창학 100년사 : 1924~2024』상, 2024, 385쪽.

41) 「교수들에 해결 일임 수산대학 농성 학생」, 『경향신문』 1980.4.17.; 「학원 진통…유형별로 본다. 문교부 집계 전문대 33교도. 17개 대학 학장실 점거 등 과열」, 『조선일보』 1980.5.9.

42) 국립부경대학교, 앞의 책, 392쪽.

43) 「동의대 휴강키로」, 『부산일보』 1980.5.13.; 「전국 대학생 가두시위」, 『부산일보』 1980.5.15.

44) 「부산공전생 농성」, 『부산일보』 1980.5.13.

45) 「부산공전생들 가두시위」, 『부산일보』 1980.5.14.

부에 반대하는 투쟁의 열기가 전국의 대학가에서 고조되었다. 부산에서 최대 거점은 대학가였다. 부산대와 동아대를 중심으로, 비상계엄 해제,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유신 잔재와 이에 영합한 어용세력의 분쇄를 주장하는 집회와 시위 및 철야농성이 전개된 것이다.

부산대에서는 5월 8일 법대 학생들이 주도하는 교내시위와 단과대 학생회장이 앞장선 시국 성토대회가 개최되어, 야간의 횃불 시위와 철야농성으로 이어졌다. 9일에는 단과대 학생회장을 선두로 1천여 명이 시위에 돌입했지만, 신·구 정문에 포진한 기동 경찰에 막혀 학교 밖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닫힌 교문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였다. 이에 단과대학 학생회장단은 「구국선언서」 “유신잔당의 마지막 숨통을 끊기에 총결기하자”를 배포하여, 비상계엄 해제, 군부의 유신잔재 제거, 노동3권 보장, 통일 성취 매진, 사복탄광과 동국 제강 생존투쟁자의 즉각 석방 등을 촉구했다.⁴⁶⁾

5월 14일 부산대에서는 상대 학생회가 주관하는 ‘전국 대학생 시국공개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에는 경찰의 감시망을 뚫고, 연세대, 고려대, 전남대, 경북대, 영남대, 동아대 등 전국에서 11개 대학에서 학생대표 8명이 참석하여, 비상계엄 해제와 유신잔당 퇴진 및 노동자의 권리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어서 학생 1,500여 명이 시위에 돌입했고, 이 가운데 500여 명은 경찰과의 충돌 끝에 가두로 나가 연좌시위를 전개했다.⁴⁷⁾ 교내로 돌아온 학생들은 도서관에 재집결하여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복교생과 4학년 학생운동가들이 지도부를 구성하여 주관한 농성에는 무려 1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도서관 1·2층을 입추의 여지없이 가득 채웠다. 농성장에서는 밤새워 시국 발언이 이어졌고, 김민기의 노래곡 ‘공장의 불빛’과 민중가요가 울려 퍼졌다. 15일에도 “계엄 해제” “휴교 반대”를 외치며 교내시위와 문창회관에서 농성을 이어가던 학생들은, 16일의 총학생회장 선거를 앞두고 오후 1시 15분 해산했다.⁴⁸⁾

46) 「10·16으로 이룩해놓은 민주화. 그 영원한 꽃을 위한 행진. 지난 8·9 양일에 걸쳐 시위」, 『부대신문』 1980.5.15.;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1998), 453쪽.

47) 「부산서도 가두시위」, 『부산일보』 1980.5.15.; 「스크립 짜고 ‘시국’ 등 성토」, 『경향신문』 1980.5.15.

동아대에서는 총학생회가 14일부터 20일까지를 민주화 대토론 주간으로 정하고, 단과대학별로 시국토론에 돌입했다. 14일 소집된 비상학생총회에는 1천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대학권리선언문」을 작성하고, 시국 전반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학생들은 비상계엄 조속 해제와 동국제강·동명목재 근로자 생계보장 등 10개 항목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계엄 해제와 노동3권 보장'을 주제로 한 민주화 대토론회를 진행했다.⁴⁹⁾

15일 오후에는 2부 대학 학생 1천여 명이 시국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⁵⁰⁾ 16일 2천여 명이 단과대학별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등 시국에 관한 전반적인 토론을 계속했다. 오후 2시 30분경 50여 명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진출하기도 했다.⁵¹⁾

이상과 같은 움직임은 신군부의 5·17내란으로 차단되었다. 5월 17일 계엄의 전국 확대와 동시에 전국적으로 민주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예비검속이 자행되었는데, 부산에서도 70여 명이 예비검속으로 구금되었다. 이 가운데는 대학에서 신군부 반대 투쟁을 주도한 학생운동가들이 다수 포함되었다.⁵²⁾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저항은 그치지 않았다.

5월 18일 오후 6시경 남포동 부영극장 앞에서 부산대 학생들의 기습 시위가 전개되었다. 학생 30여 명이 약 5분여에 걸쳐 스크럼을 짜고 짧은 시위를 벌였다.⁵³⁾ 같은 날 청야야학의 강학인 강용현(부산대 화학기계공학과 3년)과 이우주(한성여대, 현 산업대 유아교육과 2년)는 5·17내란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도심에 살포하기 위해 남포동에 나갔다가,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체포되었다.⁵⁴⁾ 5월 19일 19시 40분경 노재열(부산대 기계공학과 4

48) 양윤신 외, 앞의 책, 161·168·169쪽.

49) 「3천 학생 농성에」, 『부산일보』 1980.5.14.: 「지방대생도 도심에 진출」, 『조선일보』 1980.5.15.: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2012), 앞의 책, 287쪽.

50) 「부대 농성해제·동대 시국토론」, 『부산일보』 1980.5.16.

51) 「부산-대구-전주 평온」, 『조선일보』 1980.5.17.: 양윤신 외, 앞의 책, 162·167·168·170·171쪽.

52) 양윤신 외, 앞의 책, 177~178쪽.

53)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앞의 글, 2쪽; 이귀원, 앞의 구술. 현장에서 시위를 목격한 이귀원에 따르면, 시위 계획을 전해 듣고 시위에 참여하려 도착했지만, 시위는 매우 짧은 시간에 끝나고 말았다.

년)과 김영(부산대 철학과 3년) 등은 광복동 미화당백화점 일대 3곳에 「부산 대학교 성전 포고문에 즈음하여」 500여 장을 살포하는 데 성공했다. 유인물은 전두환의 신군부를 유신잔당으로 규정하고, 계엄 철폐와 휴교령 철폐 및 구속인사 석방을 주장하는 격문이었다.⁵⁵⁾

3. 청년층의 결집과 노동운동의 고양

1) 진보적 청년층의 '민주청년협의회' 결성 운동

18년 동안 철권통치를 자행한 권력자의 죽음은 민주진영에 새로운 희망을 던졌다. 이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민주적 요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결집의 움직임을 보인 것은 청년층이었다. 1970년대 후반 부산지역의 진보적 청년들은 개신교와 가톨릭 등 양심적 종교계와 엠네스티 등 진보적 엘리트에 기반을 두고 민주적 역량을 축적했다. 이들은 1978년 부산양서협동조합(이하 '부산양협')의 창립을 통해, 결집의 성과를 거둔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부마민주항쟁의 배후로 지목되어, 조작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 박정희가 사망하면서 배후 조작은 동력을 잃고 중단되었음에도, 1979년 11월 부산양협은 결국 강제 해산당하고 말았다.⁵⁶⁾

이들은 유신헌법으로 대통령 선출을 진행하려는 최규하 체제에 분노하면서, 이에 저항하여 계엄하에서 집회를 결행한 YWCA 위장결혼식 사건(79.11.24.)으로 위기의식이 높아졌고, 12·12쿠데타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의 부상을 목도하면서 경악했다. 이에 박정희 정권의 붕괴를 민주정부 수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또다시 군부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논의가 부산의 민주 진영 내에서 진행되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민주 세력을 재정비하여 조직을 결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갔다. 그 결과는 1980년 들어서 가시화되었다.⁵⁷⁾

54) 이우주 구술, 차성환 편집, 5·18기념재단 구술자료수집사업, 2012.

55)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앞의 글, 3쪽; 부산지방법원, 앞의 글, 25쪽.

56) 부산양협의 해산 과정은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앞의 책, 266~268쪽.

1980년 1월 중순 김재규(부산대 제적생), 송세경, 박상도(부산도시산업선교회 총무), 최준영(사회운동가), 김희옥(전 부산양협 전무), 임동규(EYC 회장), 조태원(부산대 기계공학과 3년), 고호석 등은 부산지역의 민주 활동가를 규합하여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⁵⁸⁾ 이들은 1970년대 각 분야에서 민주화운동을 벌인 활동가들로, 대다수가 부산양협에 참여한 바 있다.

박정희의 사후 이들은 부산도시산업선교회와 가톨릭노동청년회를 통해 노동운동을 지원하고, 양심적 지역 종교계를 규합하며, 부산대와 동아대의 학생운동을 후원하는 등으로 부문 운동에 몰두해왔다. 이들은 각자 활동 분야의 상황을 공유하고, 시국에 대한 정보와 대응 전략을 심화시켜 나갔다. 여러 차례의 회합을 이어가면서 논의가 구체화 되었고 다양한 인사들과의 교류도 확대되었다.⁵⁹⁾

3월 초순에 조직의 정체성은 구체화되었다. 먼저, 조직의 성격은 지식인층, 종교계, 노동계, 학생층 등 다양한 분야의 부문 운동을 포괄하는 민주화 운동 단체로 집약되었다. 그 결과, 명칭은 가칭 '민주청년협의회'로 모아졌다.⁶⁰⁾ 이는 일차적으로 박정희 정권 붕괴 후 표출된 각 분야의 민주적 흐름을 포괄하여 지역 내부의 사회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함이고, 나아가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진영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⁶¹⁾ 이 무렵 문정현, 허진수, 문계성, 박찬성 등 진보적 지역 청년들이 합류하면서, 민주청년협의회의 발족을 추동했다.⁶²⁾

5월 16일 보수동 애린유스호스텔 3층 객실에서 민주청년협의회 모임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재규를 의장으로, 박행원(중앙성당 청년회)을 서

57) 박상도 구술, 김선미 면접, 2026년 5월 23일.

58) 부산지방법원, 앞의 글, 119·149~150·231·245~246·270쪽.

59) 박상도에 따르면, 박현삼, 박점룡, 박홍숙, 임실근, 정윤석 등도 합류했다고 하며, 김재규는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박상도, 앞의 구술; 김재규 구술, 김선미 면접, 2026년 5월 24일.

60) 송세경은 '부산민주청년회'라는 명칭을 병행하고 있으나, 나머지 다른 관련자들은 모두 '민주청년협의회'라고 서술했다(부산지방법원, 앞의 글, 149~150쪽). 박상도는 다양한 부문운동의 집합체이므로, '협의회'의 성격을 지녔다고 구술했다. 박상도, 앞의 구술.

61) 김재규, 앞의 구술.

62) 부산지방법원, 앞의 글, 122·150·247쪽.

기로 선출했다. 고문으로 법조계에서 김광일·이홍록 변호사를, 종교계에서 최성묵 중부교회 목사를 추대했다. 송세경, 박찬성, 허진수, 박상도, 문정현 등이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⁶³⁾

이 모임의 성격을 두고 판결문은 ‘창립’이라고 판결했지만, 이는 사건을 과장하고 결과적으로 조작하기 위한 공안당국의 시각을 여과없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의 모임은 창립은커녕 발기모임이라 보기도 어렵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는 창립 또는 발기 취지를 밝히는 그 어떤 문건도 제시된 바 없다. 물론 참석자인 김재규 등도 이를 창립 모임으로 여기지 않았다.⁶⁴⁾ 그렇다고 해도 임원진을 선출하고, 고문을 추대하였으며, 회원을 확정한 것 등은 단체의 결성 과정에서 의미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모임은 ‘민주청년협의회 준비위원회’의 발족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날 발족한 민주청년협의회 준비위원회는 중앙에 본부를 둔 지역 조직이 아닌, 부산의 독자적 민주단체였다. 1970년대 부산의 민주화운동은 서울 또는 전국 단위 조직과의 교감 속에서 지역 조직으로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1978년 부산양협이 부산의 독자적 단체로 성공을 거둔 이래, 1980년 민주청년협의회 역시 부산에 거점을 둔 독자적 민주화운동 단체로서 깃발을 올린 셈이다.

하지만 준비위원회를 발족한 바로 다음 날인 5월 17일 전두환의 신군부가 내란을 자행하면서, 민주청년협의회 결성을 위한 활동은 사실상 정지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그럼에도 5월 18일 광주에서 참상이 벌어지자, 이들은 부산대 학생들과 함께 진상 알리기에 나섰다.

부산에 5·18의 참상을 전한 것은 이병철 가톨릭농민회 전국조사연구부장이었다.⁶⁵⁾ 5월 15일부터 광주에서 ‘농민 헌법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던 이병철은, 계엄군의 폭력적인 진압을 직접 목격하고, 20일 전주에 있는 가톨릭농민회 본부에 광주 상황을 보고한 뒤, 21일 부산에 와서 광주의 참상을 전했다.⁶⁶⁾ 이병철로부터 광주의 진상을 접한 김재규, 고평석, 송병곤, 주정민, 허

63) 부산지방법원, 앞의 글, 248쪽.

64) 박상도, 앞의 구술; 김재규, 앞의 구술; 허진수 구술, 김선미 면접, 2026년 5월 29일.

65) 양윤신 외, 앞의 책, 185~187쪽.

진수 등은 부산시민에게 광주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도심에 전단을 살포하기로 결의했다. 전단은 김재규가 작성한, “우리의 외침”과 “부산시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2종으로 결정되었다. 전단의 제작은 허진수가 맡았다.⁶⁷⁾ 허진수는 영도에 있는 후배의 거주지에서, 후배와 함께 1,600매가량의 전단을 제작했다.⁶⁸⁾

5월 24일 문정현, 박찬성, 박행원 등은 남포동과 서면 일대에 1천 매가량의 전단을 살포했고,⁶⁹⁾ 부산대 학생인 송병곤, 김근목, 장상훈 등은 서면의 변화가와 동래의 주택가에 600여 매를 살포했다.⁷⁰⁾ 전단 살포 활동은 민주청년협의회 조직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 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가능했던 일로서, 부산에서 5·18의 진상을 알린 대표적인 사례이다.⁷¹⁾ 따라서 민주청년협의회 결성은 중단되고 말았지만, 그 의미는 적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2)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과 농성 파업의 확산

1980년 초 노동운동은 한국전쟁 이후 최고의 고양기를 맞았는데, 1970년

66) 이병철 구술, 김종세 면접, 2022년. 부림사건의 판결문에는 5월 20일 이병철이 김재규 등에게 5·18 목격담을 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병철의 동선을 고려할 때, 21일에 부산에 왔다는 구술의 내용이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67) 부산지방법원, 앞의 글, 247~249쪽.

68) 허진수에 따르면, 16절지의 위·아래에 같은 내용을 쓰고, 중간을 잘라 2매로 만들었다고 한다. 따라서 1천 장을 등사했지만, 파지가 많이 생겨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전단지는 800장으로, 1,600매가량의 전단을 만들었다고 한다. 허진수 구술, 김선미 면접, 2026년 5월 29일.
69) 전단 살포에는 민주청년협의회 회원은 아니지만, 진기순, 손정염, 박홍숙이 함께 했다. 박행원 구술, 차성환 면접, 2007; 박찬성 구술, 차성환 면접, 2008; 문정현 구술, 차성환 면접, 5·18기념재단 구술자료수집사업, 2012.

70)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앞의 글, 6~8쪽; 부산지방법원, 앞의 글, 205·298~299·320쪽.

71) 이외에도 부산에서는 5·18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5월 24일 현역 군인이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서면 일대에 배라를 살포했고, 25일 신종권이 주도하는 동아대 그룹이 남포동에서 시위를 계획했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일자 미상일에 홍점자 등 지오세 회원들은 개금동 일대 등지에 유인물을 살포했고, 24일에는 김현장으로부터 「전두환 광주살륙작전」 5천 장을 부산으로 전달하던 노동길이 24일 함양의 검문소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앞의 글, 5·6쪽; 신종권, 앞의 구술; 홍점자 구술, 차성환 면접, 5·18기념재단 구술자료수집사업, 2012; 양윤신 외, 앞의 책, 188~190쪽.

대 후반에 대비하여 노동쟁의가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박정희의 사망으로 유신정권의 억압적인 노동 통제가 빠르게 이완된 데 따른 결과로서,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부마민주항쟁과 박정희 정권의 붕괴는 사회 전반에 민주화의 기대를 높였고, 이는 1980년 노동운동에 ‘열린’ 기회로 작용한 것이다.⁷²⁾

부산에서는 연초의 운수 분야를 필두로, 4월 들어 다양한 업종에서 노동쟁의가 본격화했고, 4월 말에 이르러서는 부산을 대표하는 대규모 사업장으로 확산되었다. 1월 4일 아세아운수와 제일운수 노동자 60여 명은 사납금 인하를 내걸고 파업에 돌입했다. 이는 2월 18일 대성운수로 이어졌다. 3월 14일 현대산업 노동자 250여 명은 조흥은행 부산진지점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사장(정경설)의 위임장을 무시한 은행의 채권 행사에 항의하며, 압류한 회사 자산 가운데 체불임금 지불을 요구하며 3시간 30여 분 동안 농성을 벌였다.⁷³⁾

4월에 들어서는 택시업계에 노동쟁의가 확산되었다. 택시 노동자들은 월급제 실시와 사납금 인하를 요구하며 승차를 거부하고 농성을 전개했다. 그 결과 연희택시, 제일교통, 항도택시, 동일교통 노동자들은 사납금 인하라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어서 건축·운수·섬유·서비스·조선·철강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으로 노동쟁의가 확산되었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체불임금 지급, 퇴직금 산정, 해고수당 지급, 사납금 인하, 인력 보충, 정규직 전환, 휴업 반대, 차별 철폐, 외국인 기술자·간부의 해고와 교체, 어용 노조 퇴진과 노조 활동 방해 중지 등 생존권 보장과 처우 개선 및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작업 중단, 철야농성, 파업 시위 등 격렬한 투쟁을 전개했다.⁷⁴⁾

이 과정에서 준법투쟁이 병행된 것은 부산지역의 주요한 특징이다. 1980년 1월 1일부터 4월 24일까지 부산에서는 151건의 조정신청이 행정관청에 제출되었다. 이는 같은 시기 전국 합계 511건 가운데 지역별 최다 건수에 해

72) 주무현, 「부마민주항쟁과 노동운동」, 민주공원 『부마민주항쟁 연구논총』, 2003, 255~260쪽.

73) 「“압류한 회사재산으로 체임 청산을” 종업원들 은행에 요구」, 『부산일보』 1980.5.15.

74) 지역사회문제 자료연구실, 『80년대 부산지역 노동운동』, 친구, 1989, 42~43쪽.

당되는 것으로, 노동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용한 방법 또한 최대한으로 활용한 것을 보여준다.⁷⁵⁾

이 가운데 가장 파장이 컸던 것은 동국제강, 동명목재, 연합철강의 파업투쟁이었다.

4월 28일 남구 용호동의 동국제강 부산제강소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차별 철폐 등을 내걸고 파업에 돌입했다. 동국제강 부산제강소는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현장에서, 구정과 추석 이틀을 빼면 일요일과 공휴일도 없이 격무에 시달리면서, 하루 결근하면 8천 원을 공제하고 2~3분이라도 지각하면 1시간 치 임금을 삭감하는 벌금제도가 자행되는, 악명 높은 사업장이었다. 이런 가운데 1980년 임금 결정은 파업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1979년 임금이 동결된 탓에, 1980년을 기대했으나, 부산시의 직권조정으로 15.4% 인상이 결정된 때문이다. 이는 1978년 인상률 15.6%보다 낮고,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었다. 심지어 회사는 임금 인상을 빌미로 출퇴근 시간을 20분씩 당기고 늦추어, 총 40분의 근무시간을 연장했다.⁷⁶⁾

이에 1천여 명의 노동자들은 임금 40% 인상, 일요일 휴무제 실시, 사무직 사원과 현장 노동자의 상여금 차별 철폐 등 8개 항을 내걸고 파업에 들어갔다.⁷⁷⁾ 하지만 회사측의 대응은 노동자들을 더욱 격분케 했는데, 29일 협상하기로 한 장상태 사장은 나타나지 않았고, 이준호 부사장은 농성 노동자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⁷⁸⁾ 결국 격분한 노동자들은 회사 시설을 파괴 방화하고, 맹렬한 기세로 가두시위에 나섰다. 이날 경찰은 기동 경찰 845명과 소방차 9대 및 페퍼포그 3대와 최루탄 등 막대한 물리력을 동원했지만, 노동자들은 돌맹이와 가로수 지지대로 투석전을 벌이며 경찰에 맞섰다. 결국 경찰의 물리력을 당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자정을 전후하여 뿔뿔이 흩어졌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 12명과 경찰 11명이 부상을 당할 정도로 양측의 충

75) 지역사회문제 자료연구실, 앞의 책, 43쪽; 이광수, 『부산지역 노동운동사 : 유신 말기부터 IMF 위기 직전까지』, 앨피, 2022, 60쪽.

76) 「근로자 소요 원인」, 『조선일보』 1980.5.1.

77) 「동국제강 근로자 농성」, 『부산일보』 1980.4.29.

78) 「농성 工員·경관 충돌 동국제강」, 『동아일보』 1980.4.30.; 「사장실 침입 난동 동국제강 근로자」, 『매일경제』 1980.4.30.

돌은 격렬했다.⁷⁹⁾

30일 노동자들은 1백여 명의 대표로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다시 협상에 나섰다지만, 임금인상 30%를 고수한 회사측의 태도는 완강했다. 경찰은 병력 450명을 완전무장시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연행한 28명의 노동자 가운데 14명을 무더기로 구속하며 강력한 압박을 가했다.⁸⁰⁾ 결국 5월 1일 회사와 경찰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노동자들은 농성을 해제하고, 5일 회사측이 제시한 임금 30% 인상안을 수용했다. 계엄군사재판은 구속된 노동자 7명에게 징역 7년 등의 실형을 선고했다.⁸¹⁾

5월 7일 남구 용당동 동명목재의 노동자들은 회사의 휴업 결정에 반발하여 농성에 돌입했다. 동명목재는 국내 합판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이었지만, 1970년대 말 원목 가격 상승과 건설경기의 부진 속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자금난에 빠지게 되자, 5월 7일 15일 간의 조업 중단을 발표했다. 이에 동명목재 노동자 2천여 명은 회사 운영의 정상화를 주장하며 무기한 농성을 결의했고, 과장급 이상 간부 50여 명은 ‘동명목재 조업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상화추진위’)를 결성했다.⁸²⁾

5월 8일 노동자 3천2백여 명이 모여, 사주 가족의 재산을 환원하고 재산 처분권을 노동자에게 넘길 것, 은닉재산과 회사자금의 유출 경위 조사, 계열사 처분 등 8개 항을 제시하고, 금융기관과 정부의 역할을 요구했다.⁸³⁾ 이는 강석진 사장과 일본 여성 사이에서 혼외자로 출생한 강정남이 후계자로 부상하면서, 한국인 아내와 강정남이 경쟁적으로 회사 재산을 빼돌렸기 때문

79) 「부산 동국제강 임금인상 농성-집단행동 근로자·경찰 23명 부상」, 『경향신문』 1980.4.30.: 「노사분규로 몸살 앓는 철강업계」, 『매일경제』 1980.5.3.

80) 「동국제강 근로자 기물 파괴·방화」, 『조선일보』 1980.5.1. 이 과정에서 동국제강 노동자가 아닌, 두 사람이 시위에 참여하면서,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는 노동자들의 연대의식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동국제강 ‘테모’ 주동자 색출」, 『매일경제』 1980.5.1.

81) 「동국제강 분규 타결. 임금 30% 인상 결정」, 『매일경제』 1980.5.7.: 「동국제강 분규 타결. 회사측 타협안대로」, 『조선일보』 1980.5.7.: 「5명에 징역 3~7년」, 『조선일보』 1980.6.10.

82) 「합판산업계에 적신호. 동명목재의 도산 위기」, 『매일경제』 1980.5.1.: 「동명목재 조업 중단. 자금난 15일간」, 『동아일보』 1980.5.7.: 「부산 동명목재 전면 휴업」, 『경향신문』 1980.5.7.

83) 「회사 전 재산 처분권 종업원에 양도 요구. 동명목재 직원 정상 출근 농성」, 『동아일보』 1980.5.8.: 「동명목재, 15일간 휴업 “자금난으로 기한부”」, 『조선일보』 1980.5.8.

이다. '정상화추진위원회'도 사주 일가의 재산 공개와 사장의 퇴진 및 은행과 정부 당국에 대한 대책 요청 등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⁸⁴⁾

이후 노동자들은 재산 포기 각서를 작성한 강정남의 도주에 격분하여 가두시위를 벌이기도 하고, 강정남의 신병을 확보하고도 미적거리는 경찰에 항의하는 농성을 벌이기도 했지만, 14~16일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재무부 등 정부 기관에 대책 호소에 나선 데 호응하여 농성을 해제하기도 하고, 사주 가족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생존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눈물겨운 사투를 이어갔다.⁸⁵⁾

하지만 사주 일가의 무책임한 대응, 합판사업이 사양사업이라는 이유로 정부당국이 취한 미온적 태도, 법인이 아닌 개인기업 형태를 고수한 동명목재의 후진적인 경영 방식 등은 구제금융 지원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17일 노동자들은 다시 농성에 돌입했으나, 5·17내란으로 농성은 해제되고 말았다. 5월 26일 동명목재는 최종 부도 처리되었다.⁸⁶⁾

5월 13일 남구 감만동의 전국금속노조 연합철강지부(지부장 박기식)는 임금 인상과 퇴직금누진제 부활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앞선 1980년 3월 12일 연합철강(사장 정승익)의 임금협상이 결렬되었다. 노조에서는 51% 임금인상과 퇴직금누진제 부활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17% 임금인상만을 제시한 때문이다. 특히 퇴직금누진제는 1977년 연합철강이 국제그룹(회장 양정모)에 인수된 뒤 폐지된 것으로, 그 부활을 요구한 것이었다.⁸⁷⁾ 4월 18일 노조는 부산시 노동위원회에 직권조정을 의뢰하는 한

84) 「'동명목재'-개인재산 근로자에게 넘겨주기로. 강석진 사장 어제 오후 각서에 서명」, 『조선일보』 1980.5.9.; 「'부실' 부른 집안 경영권 다툼」, 『동아일보』 1980.5.10.; 「표류 1주...동명목재 어디로」, 『경향신문』 1980.5.14.

85) 「'반납재산 명세 밝히라」, 『동아일보』 1980.5.10.; 「'강압으로 재산 반납 각서」, 『조선일보』 1980.5.11.; 「강정남 씨 신병 확보. 동명목재 근로자들 농성 계속」, 『경향신문』 1980.5.13.; 「농성 기한부 해제」, 『부산일보』 1980.5.14.; 「조업정상화추진위 경영인 선임 등 재무부에 요청」, 『동아일보』 1980.5.14.; 「동명목재 재건 호소 근로자들 농성 풀어」, 『조선일보』 1980.5.15.

86) 「불황·부실 늪에 빠진 '동명' -수출선두기업 조업단축의 충격」, 『동아일보』 1980.5.8.; 「'사양업종 지원 왜 하나'...동명목재 구제 꺼려」, 『조선일보』 1980.5.13.; 「동명목재 36억원 부도」, 『조선일보』 1980.6.27.

87) 「연합철강 농성사태」, 『부산일보』 1980.5.14.

편 회사측에 합의를 요구했지만, 직권조정 만기일인 5월 12일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하면서 협상은 최종적으로 결렬되었다.⁸⁸⁾

이에 5월 13일 연합철강 노동자 1,200여 명은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스크럼을 짜고 「임금인상·정 사장 출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사내에서 시위 투쟁을 전개했다. 노동자들의 강력한 대응에 당황한 회사측은 임기응변으로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임금을 20% 인상하고 퇴직금누진제는 경기가 호전되면 논의하겠다는 고식적인 것이었다. 이에 5월 14일 새벽 0시 30분경 격분한 노동자 200여 명이 가두 진출을 시도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⁸⁹⁾

5월 15일 노동자들은 결의대회를 개최했는데, 결의대회에는 노조원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가 참석하여, 임금 37% 인상, 퇴직금누진제 부활, 일용노동자 정식 채용, 결원 인원 보충, 사장의 노조회의 참석 등 5개 항의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 또한 회사 경영상태의 공개, 회장 소유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을 통한 회사 재무구조의 개선 등을 주장했다. 회사측이 강경한 방침으로 대응하자, 노동자들은 무기한 농성으로 맞서기로 했다.⁹⁰⁾

5월 17일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조치 이후에도 18일까지 노동자들은 투쟁을 이어갔다. 하지만 19일 노조가 무조건 현장 복귀를 통고하면서, 6일 간에 걸친 연합철강의 파업투쟁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5월 30일 부산시 노동위원회는 직권조정으로 임금 23% 인상을 결정했다.⁹¹⁾ 노동자들의 요구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1980년 봄 부산에서는 가혹한 노동조건과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눈물겨운 사투가 벌어졌다. 이는 전에

88) 「연합철강 근로자 농성 돌입」, 『부산일보』 1980.5.13.; 「임금인상 요구 농성 연합철강 종업원들」, 『동아일보』 1980.5.13.

89) 「연합 근로자 조업 전면 거부」, 『부산일보』 1980.5.14.; 「임금인상 요구 농성. 연합철강 근로자들」, 『경향신문』 1980.5.13.

90) 「연합철강 근로자 천2백명 무기한 농성돌입」, 『부산일보』 1980.5.16.; 「연합철강 농성 계속」, 『경향신문』 1980.5.14.; 「임금인상안을 거부 연합철강 농성 계속」, 『동아일보』 1980.5.14.

91) 「연합 근로자 5일째 농성」, 『부산일보』 1980.5.17.; 「농성 풀고 정상 작업」, 『매일경제』 1980.5.19.; 「연합철강 임금분규 23% 인상으로 타결」, 『경향신문』 1980.6.3.

없던 강력한 양상을 띠었다. 1980년 봄 전국적인 노동자투쟁을 촉발한 계기는 4월 8일 시작된 청계피복노조의 농성투쟁이었다. 특히 동국제강 노동자 투쟁에는 사북동원탄좌의 노동자 항쟁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때문에 동국제강 파업을 두고, '제2의 사북사태'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이다.⁹²⁾ 하지만 부산에서는 부마민주항쟁의 경험을 빼놓을 수 없다. 부마민주항쟁은 도심에서 폭발하여 부산 전역으로 영향력이 파급되었고, 일부 노동자도 참여했기 때문이다.⁹³⁾

그럼에도 당시 부산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못한 현장이 많았고, 이 때문에 단결력에서 한계를 노정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동국제강투쟁이었다. 동국제강의 경우 사북사태를 방불케 할 정도로 격렬했으나, 노조라는 구심이 없는 상황 속에서 결국 회사와 경찰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했던 것이다. 동명목재와 연합철강의 사례는 신군부의 억압적 노동통제에 나서면서 투쟁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경우이다.⁹⁴⁾ 그러나 80년 봄 노동자들이 보여준 투쟁역량은 부산지역의 노동운동이 가진 저력과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었다.

4. 맺음말

이 연구는 1980년 봄 부산지역에서 민주화운동의 전개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대학가, 청년계, 노동계의 세 범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가에서는 부마민주항쟁 이후 학생운동 조직이 확대 재건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학원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군부의 재집권을 막기 위한 실천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청년계에서는 진보적 청년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민주화운동 단체를 결성하기 위한 활동이 전개되었으며, 이는 5·18민주화운동 이후 그 진상을 알리기 위한 활동으로 이어졌다. 노동계에서는 억압적인 노

92) 지역사회문제자료연구실, 앞의 책, 43쪽;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1998), 461쪽.

93) 이병환 구술, 차성환 면접, 2008.

94) 주무현, 앞의 글, 257쪽.

동 통제를 거부하고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 노동자들의 분투가 폭발적으로 전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열망과 실천은 전두환 신군부의 5·17내란으로 일거에 중단되었다. 따라서 1980년 봄 부산지역의 민주화운동을 확인하는 것은, 지역 사회에서 5·17내란이 중단시킨 민주적 지향을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5·17내란으로 봉쇄된 1980년 민주화의 봄은, 이후 1980년대 학생운동의 고양, 1985년 부산민주협회의의 결성, 19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이어진 바, 이 연구는 그 출발점을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1. 자료

『부대신문』 『동아대학보』

『부산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조선일보』 『매일경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10·26 2군 상황일지」(부산·경남), 1980.

법무부, 「부마소요사건(89명)」, 『계엄사건총명부』, 1981~1988.

「부산대학교 성전 포고문에 즈음하여」, 1980.

부산지방법원, 「판결」(사건 81 고단 7929, 8628 병합), 1982.

중앙정보부, 「중요수사활동보고」, 1979.

_____, 「부산대 등 집단 시위 및 난동사건 수사상황」, 1979.

_____, 「부산대 등 집단 시위 및 난동사건 수사상황(2보)」, 1979.

_____, 「부산사태 수사상황」, 1979.

가점 송기인신부 은경축·화갑기념문집간행위원회, 『신부님이 거기 있었네』,
인쇄골, 1997.

국립부경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창학 100년사 : 1924~2024』 상, 2024.

김명인, 『두 번의 계엄령 사이에서』, 돌베개, 2025.

노재열, 『1980』, 산지니, 2001.

동아대학교 50년사 편찬위원회, 『동아대학교 50년사 1946~1996』, 1998.

동아대학교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그대, 민족동아여!』, 2007.

민주공원, 『민주공원과 함께 하는 부산민주운동사』, 인쇄골, 2003.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회위원회,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
보고서』, 2022.

부산대학교 오십년사편찬위원회, 『부산대학교 오십년사(1946~1996)』, 1997.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부산민주운동사』, 부산광역시, 1998.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부산민주운동사』 I,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2021.

양윤신·김종세·김근식·정성일·김성환·오도엽·허인규 편찬, 『‘광주박’ 전국의
5·18진상』, 5·18기념재단, 2024.

이광수, 『부산지역 노동운동사 : 유신 말기부터 IMF 위기 직전까지』, 앨피, 2022.

지역사회문제 자료연구실, 『80년대 부산지역 노동운동』, 친구, 1989.

김재규 구술, 김선미 면접, 2026.

김종세 구술, 김선미 면접, 2026.

문정현 구술, 차성환 면접, 5·18기념재단 구술자료수집사업, 2012.

박상도 구술, 김선미 면접, 2026.

박행원 구술, 차성환 면접, 2007.

박찬성 구술, 차성환 면접, 2008.

신종권 구술, 차성환 면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구술자료수집사업, 2008.

이귀원 구술, 김선미 면접, 2026.

이성홍 구술, 차성환 면접, 국사편찬위원회 구술자료수집사업, 2013.

이병철 구술, 김종세 면접, 2022.

이병환 구술, 차성환 면접, 2008.

이용화 구술, 차성환 면접, 국사편찬위원회 구술자료수집사업, 2012.

이우주 구술, 차성환 면접, 5·18기념재단 구술자료수집사업, 2012.

최형욱 구술, 이가연 면접, 2018.

허진수 구술, 김선미 면접, 2026.

허천호 구술, 차성환 면접, 국사편찬위원회 구술자료수집사업, 2012.

홍점자 구술, 차성환 면접, 5·18기념재단 구술자료수집사업, 2012.

2. 논저

김선미, 「1970년대 후반 부산지역 학생운동과 부마항쟁 부산대 시위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67,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8.

김희재, 「부산지역 학생운동의 메커니즘 연구」, 『학생운동의 시대』, 선인, 2013.

오재환, 「부마민주항쟁과 부산지역사회의 변화」, 『부마민주항쟁 연구논총』, 2003.

이성홍, 「70~80년대 부산지역 노동야학 운동사 개관」, 『성찰과 전망』 4,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민주주의사회연구소, 2009.

주무현, 「부마민주항쟁과 노동운동」, 『부마민주항쟁 연구논총』, 2003.

차성수, 「부마민주항쟁과 부산정치지형의 변화」, 『부마민주항쟁 연구논총』, 2003.

〈Abstract〉

Democratization movement in the Busan region in the spring of 1980

Kim, Sun-Mi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the Busan region during the spring of 1980. To this end, the aspects of university campuses, the youth population, and the labor sector were analyzed.

In the spring of 1980, student movement organizations resumed their activities on university campuses, and based on this, the movement for democratization of the campuses and the struggle against the new military regime took place. Efforts were made among the youth to form the Democratic Youth Council, which led to activities to make known the truth about May 18. In the labor sector, fierce struggles unfolded among field workers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and secure the right to survival.

Through the analysis described above, this study aims to help understand the reality of local communities in the spring of 1980 and, furthermore, to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a complete understanding of the nationwide aspects of the ‘Spring of Democratization’ in 1980.

* Key Words: Spring of 1980, busan, Student movement, Democratic Youth Council, labor movement

· 논문투고일: 2026년 6월 10일 · 심사완료일: 2026년 7월 21일 · 게재결정일: 2026년 7월 28일
